

탈북자인권실태 발표·토론회

-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인권 얼마나 심각한가?

- 일시 : 2012년 11월 7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우리사회연구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이버 탈북자인권센터
<http://cafe.daum.net/tbhuman>

탈북자인권실태 발표·토론회

-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인권 얼마나 심각한가?

- 일시 : 2012년 11월 7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우리사회연구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이버 탈북자인권센터

<http://cafe.daum.net/tbhuman>

탈북자인권실태 발표·토론회

-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인권 얼마나 심각한가?

		사회: 설창일(우리사회연구소 소장)
1:30 - 2:00	등록	
2:00 - 2:05	개회	개회선언, 내빈소개
2:05 - 2:10	소개	발제자 및 토론자, 토론회 방식 소개, 행사취지 설명
2:10 - 2:25	발제	발제. 탈북자 인권문제의 원인과 실태, 해법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2:25 - 2:50	토론	원형은 부산인권센터 대표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2:50 - 3:20		상호 토론
3:20 - 3:30		청중질의 및 응답
3:30 - 3:40		추가 토론
3:40 - 3:50		마무리

글 실는 순서

발제. 탈북자 인권문제의 원인과 실태, 해법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	6
토론 1. 우리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 - 원형은 (부산인권센터 대표) -----	20
토론 2. 탈북자 인권 문제 -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23
토론 3. 국내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26
참고 1. '전쟁위기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탈북자 단체 -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	30
참고 2.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반복활동의 실체 -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	33

▷▷ 발제문

탈북자 인권문제의 원인과 실태, 해법

곽동기(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목차

- 1. 탈북자 인권문제의 도발적 문제제기
- 2. 탈북자 인권 실태
- 3. 탈북자 인권문제 해법

1. 탈북자 인권문제의 도발적 문제제기

1)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 선 탈북자

한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달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정전체제를 지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긴장은 실제 무력충돌의 단계가 우려될 상황으로 증폭되고 있다.

“탈북자”가 문제다. 상생과 공영의 시대라는 21세기에, 한국사회 한복판에 버려진 탈북자는 우리사회의 인권실태를 되돌아보게 한다. 보수세력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북한인권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탈북자 인권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순리이다.

특히나 탈북자는 최근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쟁점현안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침투한 테러범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 테러조직이 ‘동까모’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이른바 “동까모” 사건에 연루된 탈북자 전영철은 북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행자금이 미국에서 제공됐으며 최종 승인도 미국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전영철이 폭파 계획에 “괴뢰(국가)정보원 요원인 고동균과 심가눔, 괴뢰군 기무사(령부)의 손기만이라는 자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전영철은 자신을 포섭하려고 했던 두 명의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혔고, 동까모와 북한인민해방전선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여 이런 반북테러활동의 배후가 미국과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전영철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동까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동까모 사건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주도아래, 한국으로 와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탈북자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북한에게 테러를 하려했던, 탈북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북미간 대립상황이 첨예한 가운데 발생한 이른바 “동까모”사건은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목숨 건 폭파공작에 내몰리는 탈북자들의 심각한 실태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최근 파주 등 DMZ 인근에서 문제가 된 대북전단살포 행위 등의 반복활동에도 탈북자들이 동원된다. 특히 대북전단살포 행위의 경우 한번에 20만장이 넘는 전단을 보내는 것 뿐 아니라 라디오 등의 전자기기, 심지어 1달러짜리 지폐도 풍선에 실어 보낸다.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반복활동은 이제 한반도 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반복활동은 2012년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탈북자 단체들은 2012년 9월을 ‘북한 인권의 달’로 정하여 각종 반복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스위스 제네바 등 해외원정활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연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자유조선방송,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방송매체들이 모여 “대북방송협회”를 결성하였다. 이번 ‘빠라 살포’를 강행했던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도 2012년 10월에 새롭게 결성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다.

한편, 2012년 6월에는 탈북자 단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북한 선교활동을 벌여오던 기독교 단체들이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반복활동이 전례 없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 탈북자가 부풀려질 수 있는 애매한 법 규정

탈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탈북자의 법률상의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시행, 이하 탈북자 지원법률)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정·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북한주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을 벗어난 모든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해외출장을 나온 사람도 탈북자 지원법률에 의한다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자가 되고 만다. 사실상 북한 영내를 벗어난 모든 북한주민을 “탈북자”의 잠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주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북한주민들을 북한영내에서 벗어나게만 한다면 그가 누구이던지 법적으로 “탈북자”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북한주민을 꼬드겨

중국으로 넘어오더라도 해당 주민을 탈북자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실제로는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은 매우 많다. 변경지역에서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북한주민은 중국에 나와있을 때에는 탈북자가 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남한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주민들과 한국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을 확실히 구분해 언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의 소수자 인권문제의 일환으로 탈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하므로 일단 탈북자를 한국사회에 입국한 북한주민에 한정시켜서 규정하고자 한다.

3) 탈북자 양산 구조

한국사회는 탈북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먼저 중국에 나온 북한주민의 남쪽행을 강하게 유혹하는 탈북자정착지원금이다. 탈북자들은 한국 땅을 밟을 경우,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게 되면 초기정착금제도에 따른 정착금 지원을 받은 후 여러 지역의 지역적응센터로 가게 된다. 이 때 초기정착금제도는 아래 <그림 1>와 같다.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급			주거지원금	합 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 계		
1인	300	300	600	1,300	1,900
2인	400	700	1,100	1,700	2,800
3인	500	1,000	1,500	1,700	3,200
4인	600	1,300	1,900	1,700	3,600
5인	700	1,600	2,300	2,000	4,300
6인	800	1,900	2,7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3,100	2,000	5,100

정착금 가산금			*정착금 기본급은 1년간 분기별 지급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연령	만 60세 이상	720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지급
장애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3월 이상 입원	개월 × 80	
한부모 아동보호	만 13세 이하	360 (세대당)	

<그림 1> 탈북자 정착금 현황

정착기본급은 국내 입국 탈북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 수준이다.

1900만원은 한국사회에서 성인이 정착하기엔 태부족한 돈이다.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수령액은 최고 2240만원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1년도 버틸 수 없는 액수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평생 북한에서 생활해 한국에서 경제활동 경험이 전무한 북한주민들에게 2240만원이란 돈은 전문학적 액수이며 중국사회에서도 꽤 큰 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관계로 실제 만주를 오가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이른바 2천만원이 넘는 정착지원금의 유혹 앞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착지원금을 뿌리다보니, 정착지원금을 노린 탈북브로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2240만원이라는 상당한 거금으로 북한주민들을 끌어들이는 다음 이남행 성사를 위한 소개비 명목으로 탈북주민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데일리서프라이즈가 2005년 3월 2일에 폭로하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를 들 수 있다. 이 운동본부의 한 보호국장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을 북에서 데려다 준다는 명목 하에 선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와 함께 탈북자에게 의심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한다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그는 여러 탈북자로부터 4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2006년 12월 26일, 프레시안은 2004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83%가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고, 1인당 평균 400만 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정착금 가운데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각종 정착비용을 내고나면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브로커들의 소개비 요구는 탈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탈북자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선영 전 의원조차도 2009년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 600만원 가운데 절반인 300만원을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받지만, 탈북자들은 입국 후 지불하도록 약속한 탈북지원금을 빼앗기고 나면 한 푼도 손에 질 수가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지성 탈북난민구출연합 회장은 2011년 2월 1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탈북 브로커가 약 2백여 명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탈북자를 “북한영내를 벗어난 주민”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탈북자 정착 지원금을 만들고 1인당 최대 2240만원의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정착지원금을 노린 탈북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탈북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앞선 <그림 1>에 의거하더라도 탈북자 관련 법안, 정착지원금, 탈북브로커의 탈북시스템이 완성된 2000년대 후반이 되자 탈북자는 급격히 늘어나 연간 30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4) 남한 입국 탈북자, 이탈인가? 양산인가?

그러한 관계로 남한 입국 탈북자를 “경제난 때문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아래 <그림 2>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가 매우 힘들었던 1990년대 중후반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연간 100명이 채 안 되는 규모였다. 이 시기, 상당수 북한주민이 만주와 연변지역을 오고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시절 탈북자는 정작 얼마되지 않는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북한경제가 (+) 성장에 진입해 경제난 때문에 만주일대에 일시적으로 나온 북한주민의 수가 현저히 감소할 무렵에 남한 입국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한다. 점차로 늘어나던 남한 입국 탈북자 수는 2006년에 연간 2000명을 돌파하더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매년 3000명에 육박하는 남한 입국 탈북자가 양산되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입국 수가 전체의 95%에 달할 정도다.



<그림 2> 연도별 탈북자 입국 현황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던 90년대에는 정작 얼마되지 않던 탈북자들이 2000년대 들어 집중적으로 한국땅을 밟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 더욱 큰 규모로 늘어났다는 통계자료는 국내 유입 탈북자가 북한내부의 경제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요소보다 남북관계와 남측의 대북정책에 오히려 더 크게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상당수 탈북자는 희생자

탈북자는 이제 다른 의미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2006년 7월 17일, 월간중앙 8월호가 국내거주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체의 54.6%나 되는 응답자가 '처벌이 없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측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탈북자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하며 44%에 달하는 탈북자가 한국사회 내에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탈북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26만9000원으로, 전국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271만원의 47% 수준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들 가운데 3.2%수준인 기초생활수급률도 탈북자 계층에서는 54.4%로 큰 비중을 나타낸다.

남한이 좋아 북한을 버리고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 탈북자의 54%는 오히려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수 탈북자는 무분별한 탈북양산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의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그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며 상당수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른바 "귀순용사"라 부르던 80년대 냉전식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진정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한다면, 원하는 탈북자들에 한해서는, 이른바 "자유송환제도"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자 인권문제, 우리사회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항목이다.

2. 탈북자 인권문제 실태

1) 한국 입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탈북 브로커들이 북한 주민을 유인하여 인신매매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브로커 중에는 한국행을 빌미로 북한주민을 속이고 북한주민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2011년 4월 12일자 YTN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인 브로커가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 70여 명을 인신매매해 합숙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대부분이 현지에 연고가 없고 처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탈북할 의사가 없는데도 브로커에 의해 납치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북중 국경에는 북한 주민을 유인하여 중국으로 빼내는 브로커와 중국으로 인계된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브로커가 긴밀하게 공조하는 탈북 중개시장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이 중개시장을 이용하여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브로커에 속아 중국으로 나왔다가 한국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탈북했다가 6년 만에 재입북한 박정숙씨의 2012년 6월 28일자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전쟁당시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 돈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2005년 3월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이후 "이국 땅에서 괴뢰정보원 놈들의 유인전술에 걸려들어 그들의 각본에 따라 이농저농의 손으로 넘겨져 6월 29일 아침 9시경 남쪽 땅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숙씨는 부친을 만나기 위해 '칭다오 가는 배'를 타려고 했으나 '이농저농의 손으로 넘겨져' 한국에 도착했고, "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칭다오로 가는 사람이다. 남쪽에 잘못 왔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항변했으나 "여기는 가고 싶으면 맘대로 가는 데가 아니다며 약 20일간 취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제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가 43년간 함경북도 길주에서 살다가 탈북했던 히라시마 후데코(67세, 平島筆子·안필화)씨가 자신은 일본으로 유괴납치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여동생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 말에 탈북하였는데,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정한 이상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브로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을 남겨 두고 탈북을 한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또 다시 가족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2009년 1월 13일자 민주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3년 탈북한 이모씨의 경우 탈북 브로커를 만나 한국영사관으로 들어오기까지 45일간 “다른 탈북자 18명과 함께 베이징시 변두리에 위치한 아파트와 농가를 옮겨다니며 여성으로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켜봐야 했다.”고 한다. 또한 2006년 탈북자 난민 신분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신요셉씨의 경우 탈북을 주선한 인권단체 간부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오히려 협박을 일삼자 여기에 한을 품고 죽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하였다.

2) 잠재적인 범죄자 대우

체제 대결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하는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기 보다는, 탈북자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잠재적인 간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적대적 관점은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다.

탈북자 지원법 제 5조 3항, 제 10조 1항, 제 11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의하여 탈북자들은 6개월간의 국정원, 경찰, 군의 합동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며 3개월간의 소위 정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6개월간의 합동구속수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착제도이다. 이 수사는 모든 탈북자들에 대하여 진행되며 탈북자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이는데 조사기간 동안 탈북자는 독방에 수용된다. 그리고 조사기간에는 그 어떤 외부적 접촉이나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의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의 2012년 3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 기간에 탈북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벌어질 때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 신문조사가 끝나면 탈북자는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된다. 모든 탈북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간의 정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외출제도’의 폐지로 하나원생들에게는 12주 교육기간에 직계가족에 한해 한차례만 면회가 허용될 뿐이다. 하나원의 교육은 12주간 실시되는데 이 12주 동안의 하나원 생활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직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인터넷의 사용도 금지된다. 외출도 직업 훈련·시장구매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8호, 2010.3.26.) 제 28조는 “보호대상

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 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수집해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3S-NET)'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의 이사, 출산, 가족관계 등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세세한 사항까지 담겨있다고 한다. 2012년 10월 7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현재 5년으로 정해진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명단에는 현재 탈북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오른 조명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통해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반복활동을 10년째 하고 있는 한 탈북자에게 [신변보호]담당 경찰관들이 계속 따라 붙고 있으며 이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오히려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고 다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당 거주지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3)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탈북 브로커에게 정착금을 갈취당하므로 탈북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는 자본주의 경제에 어두운 나머지 브로커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채를 쓰는 등 정착하자마자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지식부족, 변변치 않은 일자리와 낮은 소득수준으로 탈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 성인이 자기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2.5%로 한국의 일반 국민의 61%에 비해 약 19%정도 떨어진다. 고용율은 더욱 심각해서 일반 국민의 고용률은 58.7%인데 탈북자의 경우 38.8%에 불과해 거의 20%가 차이난다.<표 1> 그나마 고용된 탈북자 중의 약 50%는 단순노무, 기계조작이나 조립, 일반서비스 종사자이다. 탈북자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단순 노무직 또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표 2>

조사 연도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취업자	실업자		일반국민(%)	일반국민(%)	일반국민(%)
2010	1,200	510	465	45	690	42.5	38.8	8.8
						61	58.7	3.7

<표 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고용 및 취업 현황 ('11.1월) 2011, 임태오,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2010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자료 재인용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근로 유형 중 사무직을 포함한 전문·고위직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기술직(23.3%), 판매·서비스직(30.5%), 단순노무(23%)의 비율이 전체 76.8%에 달했다.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010년 보다 더 늘어나 탈북자의 고용현황이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구분	단순노무	기계조작, 조립	기능종사자	전문가 관련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어업	계
2010	빈도	95	91	26	49	16	87	41	55	6	465
	비율	20.4	19.6	5.2	10.5	3.4	18.7	8.8	11.8	1.3	100

<표 2> 북한 이탈주민 직업별 취업 현황 (2010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자료)

직업훈련의 문제도 있다. 탈북자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59.6%가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직업훈련의 경우 6~8개월 정도가 걸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2005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진행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국내탈북자 인식조사에서 한 탈북자는 “직업이 업고(없고) 아이 있으니까 신통한 직업 못잡지 그래가지고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형편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기초 생계비로 살아가는데 미래가 아직 신통치 않으니까 근심이죠.”라고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탈북자들은 취업이 되지 않거나 주로 단순노무, 일용직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탈북자 1만938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46.7%인 90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탈북자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21만 3000원에 불과해 일반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01만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은 탈북자 3인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두 가구의 생활 수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탈북자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7만1333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인 177만8706원에 비해서도 10만7373원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4) 범죄에 노출되는 탈북자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처지가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이 한국의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 물정에 어둡다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에 내놓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상황에 어두운 탈북자들의 상황을 이용한 탈북자 대상 범죄는 23.4%나 된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의 일반 범죄 발생률(2005년 법무부 집계)에 비해서 5배나 높다.

내용	빈도	백분율
사업 및 투자관련 사기피해	12	28.6
개인 간 돈거래에서 미수금	11	26.2
북한의 가족초청관련 사기피해	8	19.0
소비자 사기피해	7	16.7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4	9.5
합계	42	100.0

<표 3> 탈북자 대상 사기 범죄 유형 경찰대학교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사기 범죄 유형에서 54%를 차지하는 것이 사업 투자와 돈거래인 것에서 보듯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다단계 범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에 의해 정착금을 뜯기는 것도 모자라서 남은 돈마저도 사기피해로 사라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빠지다 보니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나원에서 막 나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같은 탈북자라고 믿었다가 이를 이용한 범죄에 당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직접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탈북 여성들의 해외원정 성매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가 하면 보험사기에 동원되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 환자로 등록하다가 적발되는 등 그 사례는 많다. 중앙일보는 2010년 3월 기사에서 한 탈북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밝히며 “탈북자들을 겨냥해 범죄를 부추기는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들도 있어요. 서울·경기·대전 지역에는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전문 병원까지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제범죄 뿐 아니라 강력범죄도 심각하다.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중상류 생활을 원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점차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의 범죄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탈북자들이 범죄의 구렁텅이 빠져드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8,835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1,687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강력 범죄자는 살인 5명, 폭력 603명, 강간 12명 등 899명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5) '반복정치활동'에 동원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쉽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거기다 직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소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보니 일부 단체들이 '반복정치활동'을 요구하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약속하는 경우 '반복정치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반복정치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브로커

와 반북단체들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여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포섭한 후 이들을 사전에 기획된 정치적 쇼에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내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 탈북자들을 단체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미리 기획된 정치적 쇼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에 탈북자들이 동원되는 꼴이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기획탈북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오히려 중국내 탈북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대규모 기획탈북은 비교적 시들해졌다. 최근에는 대규모 기획탈북 대신에 탈북자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까모 같은 굵직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생겨난 직후부터 탈북자들은 군대, 지자체 등에서 안보 강연회를 하였고, 교회 등에서도 각종 간담회를 통해 반복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탈북자를 이용한 반복 강연을 개최하는 것은 북한을 비방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가지게 하여 반복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강연회를 주최한 측은 북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바라게 된다. 한편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강연 내용을 과장하여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려 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과장과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동원한 반복 강연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안보강연에 동원되고, 보수우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탈북자들이 전체 탈북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탈북자 전체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탈북자 중의 일부는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주간 경향 969호의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탈북자는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보수우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보수 세력과 함께 나오는 몇몇 탈북자가 마치 탈북자를 대표하는 모습인 양 비쳐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탈북자는 2세대 탈북자들의 경우 “극단적 주장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북한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들어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공안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안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단순 탈북자가 간첩으로 둔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8년 위장 탈북 간첩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원정화 사건은 원정화가 군인장교와 탈북단체 간부 등을 통해 주요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원정화와 관련있던 황모 대위와 계부인 김동순씨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런데 2012년 7월 5일 계부인 김동순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이 있었다. 김동순씨는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간첩의 허위 왜곡 진술로 인해 북한의 고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였던 것이다. 게다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정화에 대해서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원정화의 자백을 기초로 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공소 내용을 두고 탈북자 대부분은 말이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평소 그녀의 생활태도와 행동을 고려했을 때 간첩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6) 탈북자 인권 실태 심각하다.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의 조사결과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지난 2008년 10.4%, 2009년 16.3%로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 6.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탈남’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탈북자들 중 공식적으로 이민을 간 숫자는 42명이지만 이민이 아니라 위장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 2012년 4월 3일 자 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탈북자의 10% 가량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위장 망명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탈남’하여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미 2010년에 시사저널 1085호는 ‘탈북자 2백여 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2년에만 재입북한 탈북자가 1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3. 탈북자 인권문제 해법은 자유송환제도

탈북자단체들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삐라살포”에 나서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모든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민주화 운동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다. 일례로 강원도민일보는 10월 30일, 임진각 삐라살포를 시도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20여개 보수단체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날 삐라살포를 시도한 회원들은 약 4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반북보수단체가 섞여있어 이들 모두를 탈북자라고 볼 수도 없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2011년까지 누적도합 2만 3천명인데 삐라살포 행위에 나선 회원은 4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전체 탈북자의 0.2%인 셈이다. 나머지 99.8%의 탈북자는 대북삐라 살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북삐라살포는 탈북자들의 요구가 아니다. 일부 반북단체들이 탈북자단체란 이름으로 몇몇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1) 그들은 과연 “지옥”을 탈출하였나?

많은 남측국민들은 탈북자를 그야말로 “처참한 인권유린지대를 탈출해 온 난민” 정도로 인식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다소간 생활고를 겪는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생활보다는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2006년 7월 17일, 월간중앙 8월호가 국내 거주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체의 54.6%나 되는 응답자가 ‘처벌이 없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가 300여명에 불과해 다소간의 오차를 감안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50%가 넘는

탈북자들이 '처벌이 없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한국의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라는 "동토의 땅" 북한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보수세력의 주장처럼 탈북자들이 과연 "지옥"을 탈출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28일, 서울에 거주하던 탈북여성 박인숙씨가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하였다. 회견장에서 박 씨는 "쇠고랑을 채워도 할말이 없는 나를 극진히 대해줄 때 고마움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말했고, 아들 김진명 씨(41)는 "(박 씨 탈북 뒤에도) 나라에서는 나를 학업에 전심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모친이 탈북했지만 아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7월 22일, "제주도에 정착했던 탈북 여성 3명이 5월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 내 탈북했으며 각각 20대 후반, 30대 중반, 40대 초반"이라는 것이다. 남측에 내려와서 몇 년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올해 재입북 탈북자 수가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도 제1085호(2010년 8월10일자) 커버스토리에 '탈북자 2백여 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사저널은 탈북자들이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혈혈단신 북한으로 재입북한 경우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이 탈북자가 탈북하더라도, 이후에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다시 북한에 들어가 가족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다.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하려면 최소 6개월 가량의 합동구속 수사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가족들이 아무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지도 않고 원래 주소지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탈북을 시도하다 두만강에서 적발되면 총살당한다는 등, 탈북자의 가족은 즉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등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만일 북한에서 온 가족을 강제수용소에 몰아넣고 때려죽이고 굶겨죽이는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다면 설령 꿈에서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게다가 적발될 경우 총살당할 북한으로,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겠는가?

탈북자의 설문조사 결과는 결국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탈북자 자유송환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국내 탈북자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탈북자 자유송환을 제안한다.

탈북자 자유송환이란, 한국에 들어온 북한주민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 적응이 힘들고 생활고가 심한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다. 탈북자 모두를 돌려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사에 따르되 한국에 남겠다는 사람은 계속 한국에 남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다.

탈북자는 한국사회와 북한사회를 모두 경험해 본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북한체제에서 태어나 자랐으므로 북한사회의 속성과 북한정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처벌이 없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한다'는 생각을 하는 탈북자가 조사응답자의 50%를 넘는 현실은, 상당수 탈북자들이 진지하게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실제 처벌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북한으로 돌아갈 탈북자가 상당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자 자유송환이 탈북자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필요하다면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남북공동의 대책을 북한당국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송환제도를 실시하면 탈북브로커를 양산시키는 자금원천인 탈북자 정착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 언제든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착지원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돈을 목표로 기획탈북을 일삼는 탈북브로커들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국내유입 탈북자가 줄어들면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도 줄일 수 있으며 상당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같은 상당한 예상절감 효과는 북한으로 재투자해 송환탈북자들의 북한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북자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남북한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탈북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으며 정착지원금을 노린 인간사냥, 인권유린이 제기되겠는가.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북한에서 수십년을 살아본 탈북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돌려보내드리는 것이 탈북자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이 아닐까 한다.

북한정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기 때문이다.

▷▷ 토론문 1.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원형은(부산인권상담센터 대표)

우리사회연구소 연구논문 [탈북자 인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한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실태”를 잘 읽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이웃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항상 궁금해 왔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경험을 갖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일선에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주지 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들은,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왔던 실향민들과 그 2세대들은, 또 일반 민주시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자료를 보고 싶었다. 아쉽게도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들만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실태”를 읽으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북한이탈주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대한 제안은 없다. 이런 현실이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어쩌면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체제대결의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단체(수구적이든 진보적이든)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현실이다. 그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게 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권은 정치로서 풀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념이 앞서는 정치로서는 인권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만다.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를 향후 5년간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 설정이 어려운 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에 두고,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와 난민, 그리고 새터민 등 11개 분야를 지적한 바가 있다. 그 중에 나열된 새터민 인권보장의 현황 및 필요성을 보면, ‘새터민의 초기 입국시 조사과정과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함’ ‘새터민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과 교과과정의 차이 등으로 학업중도 탈락률이 일반학생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 ‘취약계층 새터민(무연고 청소년, 장애 새터민, 모자세대, 노인세대 등)의 취업·의료·교육 등의 보호대책이 미비함’ ‘국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이 직장과 지역에서 새터민에 대한 차별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마련되고 시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시효가 지나고 또 1년이 더 지난 오늘 우리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은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상담과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년간 진행해 오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본인이 습득한 능력은 이 땅에서 그다지 필요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본인들의 실망이 크고 고향땅에 있을 때부터 어려운 생활을 영위를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굳은 결심과 의지로 직장을 갖는다 해도 문화적 사회적 다른 배경에서 오는 차이로 인하여 적응이 어려워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기가 쉽고 국가에서 주어지는 기초수급의 끈을 놓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당히 크다.

편견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침해가 끊이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달갑지 않은 사회복지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항상 자신들을 짐으로 생각하는 차별적 시선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적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계층이 열등한 계층을 ‘동정’하는 차원에서 베푸는 것이라는 ‘위계적 태도’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태도에는 반세기의 분단과 냉전 체계로 인해 형성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무형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및 직업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며, 이런 인식과 행동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분단되어 극단적인 대치상태에 있던 남북한 사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만으로도 민족적·통일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민족 통일에 있어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인권을 가진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차원의 변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었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정된 취업 및 성공적인 정착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 '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로써,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실현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때문에”(빈부, 학력, 직업, 성별, 연령 등)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느냐가 그 사회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강자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고 고통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로 경찰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다시 되묻고 싶다.

“너는 함부로 북한이탈주민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마라. 너는 그들을 몇 번이나 만나 본 적이 있느냐?”

▷▷ 토론문 2.

탈북자 인권 문제

장경욱(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탈북자 간첩 사건의 조작

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결 적대 정책이 노골화되는 속에서 원정화 사건에서처럼 단순 탈북자에 지나지 않는 자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허위진술로써 스스로 북한 간첩임을 자처하게 되는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빈발

나. 특히 이명박 정부가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위장 탈북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등(중앙합동신문센터) 합동수사팀의 합동수사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강화한 이후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빈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혹이 날로 증폭

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절차가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혹의 중심

라.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신문은 탈북자가 국내 입국한 때로부터 외부와 일체의 접촉이 차단된 독방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사실상의 장기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북한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의 모든 행적을 자서전 형태의 진술서로 반복해 작성하도록 강요당하고 공안수사기관은 이들 탈북자를 단지 대북정보수집의 대상으로 보거나 잠재적 위장 간첩으로 보는 가운데 폭행과 가혹행위, 강압적 조사, 모욕적 언사, 기망과 회유 등 반인권적, 비인간적 강압 조사와 대우를 통해 간첩 조작의 대상으로 악용

마. 분단 상황을 악용해 단순 탈북자들이 반복선전의 도구나 대북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전략하거나,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으로 조작 간첩 사건의 대상으로 악용

바. 신메카시즘적 종북몰이가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분단 상황을 악용해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정략적 움직임에 쫓겨 박아야

2. 기획탈북

가. 북한 악마화 내지 기괴화 여론 선동을 위한 북한 인권 및 민주화 문제 제기, 조장 차원의 탈북자 양산의 기획 탈북 체계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의 필요성

나. 기획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 관리하는 탈북 브로커(대북정보원), 중국의 조선족 인신매매단, 탈북자 지원 선교 단체의 목사, 선교사 등의 영리 목적 내지 북한 선교 활동 명분의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탈북자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인신매매,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나, 이에 대한 피해자 또는 사회적 차원의 전면적 문제제기는 미약

다. 국정원은 탈북자 양산을 기획 탈북 체계를 수립하면서, 탈북 브로커 및 북한 선교 단체의 목사 등과 연계하여 탈북자들을 남한에 약취, 유인하기 위하여 외국(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특정 지역에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비공식적 안가 내지 집단수용시설을 설치하여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정보수집,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여 집행

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위장 탈북간첩 색출과 대북 정부수집 명분의 6개월에 이르는 중앙합동신문센터(대성공사)의 신문,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상태의 회유, 협박, 모욕, 구타, 가혹행위, 자살, 허위 자백에 의한 간첩조작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

마. 국가정보원은 원정화, 김미화, 이경애 등 소위 위장 탈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반담처 소속 여자공작원에 대하여 “밀천이 필요없는 성매매를 통해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비밀공작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법원 또한 위촉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어 보일 정도의 복에 대한 악마화, 기괴화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

바. 우리 사회의 현재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과 추방에 대하여 탈북 브로커 내지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탈북자들이 복에 추방될 경우 생사의 문제로 간주하고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단식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이도 격려 방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 비상식적 상황

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운동 단체(반북활동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가정보원의 개입과 관리, 지원에 의하여 활동하는 관제단체로서 박성학 등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 중국 동북 3성에는 탈북자동지회, 진달래회, K1200조, 무궁화조, 삼지연조, 백두산조, 동까모(김일성 동상 까부스는 모임) 등 탈북자를 중심으로 반북활동을 자행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실제로 평북, 함북, 자강도, 양강도 등지에 침투하여 김일성 항일 전적지 및 김부자 동상파괴, 빼라 살포 등 반북 활동 자행 중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가. 분단냉전체제와 대북적대정책의 산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탈북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하여 분단의 문제, 대북 적대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가능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가능

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탈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이기보다는 기획 탈북을 조장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대북정보수집과 위장 탈북 간첩 사건을 조작해 내고 탈북자들을 공안 차원에서 관리하며 탈북자들이 북으로 돌아갈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악법이므로 반인권적 법률로서 폐지 및 개정이 되어야 함

다. 현재 탈북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범죄인이 되거나,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노동착취당하거나, 성매매로 전전하거나, 간첩 조작 또는 역으로 반북활동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되고 있으나 스스로 이러한 피해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그 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잠자고 있기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유 및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법률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라. 기획 탈북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규제 조치의 필요

▷▷ 토론문 3.

국내외 북한이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북한이주민

북한이주민의 범위는 북한을 벗어난 남한과 3국에 거주 또는 머물고 있는 북한 국적을 가진 모든 이들을 통칭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북한을 벗어나 있으나 왕래가 가능한 이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발제문에서 북한이주민의 폭넓은 규정이 북한이주민의 수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내의 실정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벗어난 사람들은 모두 북한이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이주민은 크게 남한에 입국한 24,309명(2012. 10. 기준)과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중국을 비롯한 3국에 거주하는 수만 여명으로 나눌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초기 정착단계의 물질적, 제도적 지원 외에는 궁극적으로 남한국민과 아무런 차별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여권을 만들 수 없으므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등을 주장하며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내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160여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엄연한 국가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한 이들을 특별법과 제도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이 아닌 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을 무조건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남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만도 없다. 정치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접근으로 다가갈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일 것이다.

남한내의 북한이주민

- 1) 남한내 법률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인 ‘새터민’으로 대체하여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을 혼용하여 씀.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이주 해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이주민’이라고 쓰기로 함.

통일부 잠정집계로 2012년 10월 기준 남한입국 북한이주민은 24,309명이다. 이중 남성이 7,504명, 여성이 16,805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69%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7,292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뒤이어 20세~29세가 6,460명으로 27%, 40세~49세가 3,826명으로 16%, 10세~19세가 2,764명으로 12% 순이다. 이들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전체의 70%인 16,569명에 이른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67.3%), 함경남도(9.4%), 양강도(7.5%), 평안남도(3.6%), 평안북도(2.8%) 순이었다.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95%)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탈북 동기는 생활고(54.3%), 가족동반(16.1%), 체제불만(6.8%), 처벌우려(6.8%) 등의 순이었으며 자유동경을 이유로 탈북한 이들은 2.2%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65.4%는 서울(29.4%), 경기(26.6%), 인천(9.4%)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²⁾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을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등 3국에 있는 북한이주민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 틀림이 없다. 인권운동진영이 만났었던 중국내 북한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중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북한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들 중 남한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이들은 북한을 벗어난 지 상당기간이 지난 소수에 불과하였다. 결국 북한을 벗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이고, 남한에 정착하여서도 북한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2,000만원수준의 정착지원금이 탈북을 양산한다고 지적하였고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북한을 떠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이주민의 남한 정착지원금은 오히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남한내의 반북단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민간기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중복되는 연구용역 등을 정착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정착금을 현실화 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북을 떠난 이들이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을 줄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도 지난 십 수년간의 어려움을 타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입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그러나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주민들은 정착이후 보다 입국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와 마주하게 된다. 남한에 입국하는 순간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통일부 등에게 합동심문을 받게 된다. 이때에 임시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구금을 하게 되는데 범죄 피의자도 아닌 북한이주민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들은 합동심문 기간 동안 독박구금, 언어폭력, 협박 등에 시달리기도 하며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또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을시 정착금을 깎이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심문과정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있어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 사전에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조사받는 이의 권리 등에 대한 고지는 역시 전혀 없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법개정을 통해 기존 90일이었던 합동심문조사 기간을 별다른 논의 없이 180일로 늘렸다. 2008년 이후 검거된 간첩들이 모두 북한이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2)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연구원 발간 「북한인권백서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발간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등 참조

북한이주민을 가장한 간첩의 침투를 차단하고 정착지원금을 노리는 재중동포들의 위장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주민들 모두를 잠정적 간첩으로 전제하는 발상으로 매우 심각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발표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북한이주민 4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172명(43.1%)이 국정원 등의 '합동신문 기간 중 직원의 언행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고, 응답자 177명(44.6%)은 '직원의 태도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답했으며, 폭언을 들은 64명 중 58명(90.6%)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또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임금 차별'로 인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싶다'는 응답자가 160명(40.2%)에 달했다.³⁾ 지난해 말에는 합동신문 조사를 받던 북한이주민이 자살을 하였으나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 합동신문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착과정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착지원금이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북한이주민 고용지원금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이주민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된 직장과 주거안정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 북한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운영이 보다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북한이주민들이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연류 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3국 거주 북한이주민

중국 등에 있는 수만명의 북한이주민들을 위해서는 남한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중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에 있는 북한이주민들에게 임시거소증을 발급하여 취업과 세금 납부, 은행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시에만 북으로 송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정 기간마다 거소자격을 갱신한다면 재중 북한이주민들의 참담한 인권상황도 개선되고 북한이주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외교적 갈등도 해결될 것이다. 또, 태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북한이주민 수용소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서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자유송환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의 각종 법률과 국제사회의 규범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송환제도를 채택한다면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강제송환 등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송환제도를 남한에 이미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한정부의 입장에서는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의지를 확인하고 북으로 송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주민들의 경우에서도 입국하자마자 북으로 갈지, 남에 남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겨레, 2012. 10. 25일자 기사 참조

북한이주민 인권

북한이주민 3만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 북한이주민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면서도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지,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민간의 정착지원이 적절한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3국에 있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그들이 오랜 시간 체류하면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남한, 북한, 제3국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글 1.

'전쟁위기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탈북자 단체

김성훈(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10월 22일 오전 11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라는 탈북자 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이른바 '대북빠라'를 살포하려 하였다. 같은 시각 임진각 주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대북 빠라 살포'에 대응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군도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도발 원점에서 나아가 지원세력까지 응징하라'는 정승조 합참의장의 명령은 사실상 '유사시' 전면전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만일 탈북자 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 빠라' 살포를 강행했다면 사태는 전면 전쟁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에 탈북자 단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발생한 '동까모' 사건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동까모' 사건과 관련한 7월 20일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민심을 와해시키고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해 종당에는 우리 제도를 전복해보려는 극악한 적대행위로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가장 악랄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군 무력이 갈수록 증강되는 현실 속에서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이러한 반복 활동들은 실제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마치도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과 같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상황이 연상된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와중에 남과 북 사이의 작은 불꽃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빠라 살포'의 목적은 북한 체제 붕괴

이번 '대북 빠라 살포'를 추진했던 단체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라는 탈북자 단체의 연합 조직이다. 북민연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북한에 대한 반체제 성격을 전면으로 내건 단체부터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민자립센터 등 이른바 '인권'을 표방한 단체까지 다양한 20여개 탈북자 단체를 망라하고 있다.

북민연 김성민 위원장이 대표로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의 주장에 따르면, 북민연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새로운 결사체"라고 한다. 또 탈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 대표인 장진성은 북민연의 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단체활동을 통해 검증되고 선발된 20여개의 우수한

핵심조직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본다면, 북민연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셈이다.

북민연과 같은 탈북자단체들이 과거부터 벌여온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대북 빠라 살포'다. 이들은 한번에 20만장이 넘는 전단과 라디오, 풍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기기,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를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꾸준히 보내왔다.

'생계형 반복활동'으로 내몰리는 탈북자들

그렇다면 일부 탈북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반복 활동에 나서는 것일까. 물론 이들의 행동이 자기 신념에 의한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공안 기관이 이들의 반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994년 한국에 들어온 한철길씨의 증언은 탈북자를 반복 활동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기관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철길씨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기획 탈북'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이른바 '1세대 탈북자'다.

2011년 8월 17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철길씨는 한국 입국 후 '자신의 첫 임무'가 '통일부 홍보 강사'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당시 다른 별목공과 함께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강연에 돈을 받고 종종 불려 나갔다고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철길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원고는 경찰이 써주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았는데, 따라다니는 형사 2명의 밥값을 계산하면 5만원 남더라고요. …… 돈 없으면 지옥 같은 이 나라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금은 그냥 (한국을) 떠날 생각뿐입니다."

비단 이러한 상황은 한철길씨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탈북자들의 경제적 처지에 대하여 "탈북자는 한국 사회 최하층을 이룬다."고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이 인용한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자료를 보면, 국내 탈북자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탈북자의 63.4%는 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지 못했다. 또 탈북자의 80.4%는 근로소득액이 150만 원 이하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탈북자들은 공안기관이 요청하는 이른바 '안보 강연' 등 반복 활동을 거절하기 힘든 처지라 할 수 있다.

'동까모' 사건에 연루되어 북한 안전보위부에 검거된 전영철의 증언도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반복 행위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다. 전영철은 현재 북민연에 소속된 북한인민해방전선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큰돈을 주겠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생활할 당시 알려진 전영철의 경제적 처지나 궁핍한 탈북자들의 사정, 그리고 일반적인 공안기관의 행태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위험천만한 수구세력의 탈북자 동원

반복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기도 한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의 주장을 들어다보면 탈북자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2010년 9월 28일 자유

아시아방송과 가진 제성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통일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의 민주화입니다. 2004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전략회의를 제가 몇 차례 연 적이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자꾸 모여서 역량이나 규모가 소규모이고 열악했을 때, 일종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힘을 모으는데 제가 나름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성호 교수가 말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의 중심에 바로 탈북자 단체가 있다. 결국 그가 탈북자 단체들의 힘을 모아낸 이유는 북한 정권 붕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은 국내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반복활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이는 반복활동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 위험천만한 '방아쇠'가 되어 민족의 공멸을 불러오고 있다.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빠라 살포' 등의 반복활동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실제 탈북자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주간 경향 969호의 기사에서 한 익명의 탈북자는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보수 우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보수세력과 함께 나오는 몇몇 탈북자가 마치 탈북자를 대표하는 모습인 양 비쳐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남북합의 지켜 민족 공멸을 막아야

탈북자 단체들의 반복 활동은 그 동안 온 겨레가 어려운 조건에서 만들어진 합의 사항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언론, 빠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으며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은 제성호의 주장처럼 '북한 정권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합의 사항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있다. 탈북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반복 활동에 내모는 한국 사회 수구보수세력들은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글 2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반복활동의 실체

김성훈(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반도 전쟁위기로 인해 현 정세는 전쟁 전야다. 현 전쟁위기는 10월 22일, 이른바 '빠라살포'를 전후한 남북의 군사 대치상황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반복활동은 이제 한반도 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반복활동은 2012년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탈북자 단체들은 2012년 9월을 '북한 인권의 달'로 정하여 각종 반복 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스위스 제네바 등 해외원정활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연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자유조선방송,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방송매체들이 모여 "대북방송협회"를 결성하였다. 이번 '빠라 살포'를 강행했던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도 2012년 10월에 새롭게 결성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다.

한편, 2012년 6월에는 탈북자 단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북한 선교활동을 벌여오던 기독교 단체들이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반복활동이 전례 없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이 벌이는 반복활동의 실체는 무엇인지 파헤쳐 본다.

미국의 '저강도 전쟁'에 동원된 탈북자 단체

10월 22일 대북 빠라 살포를 강행했던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아예 스스로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새로운 결사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북한민주화'는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저강도 전쟁행위이다. 바로 미국의 대북작전계획, '작계 5029'의 첫 단계인, '급변사태 유발', '내란 유발'과 관련된 활동인 것이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를 유발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개입 무력침공으로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반미 성향의 각국 정부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지난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과 같은 전면전 보다 이른바 '저강도 전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직접 효과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통일학 연구소 한호석 소장은 '제4세대 전쟁론과 지뢰방호차량'이란 논문에서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는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도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처럼 전개될

것”으로 가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호석 소장은 미국이 “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군사점령→반란진압으로 이어지는 길고 복잡한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2012년 ‘키 리졸브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지난 7월 이른바 ‘동까모 사건’이 성공했다면, ‘작계 5029’가 규정한 ‘북한 내란 상황’에 해당되는 일이 터진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이에 따라 국군의 북한 침공을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이처럼 2012년 한반도는 사실상 미국에 의한 ‘저강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북한 내부에서 반란을 유도할 목적의 ‘대북 삐라 살포’ 시도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벌이는 ‘저강도 전쟁’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남측에서 “사소한 삐라살포음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반복활동 자금도 제공하는 미국

미국은 ‘작계 5029’에 근거한 탈북자 단체들의 반복활동자금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의 법적 근거는 바로 ‘북한 자유법안’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2003년부터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혀 종국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법안’을 시행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탈북자 캠프나 정착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 외국 기관들에 해마다 2천만 달러씩 지원할 수 있다. 중앙일보 김종혁 특파원은 ‘북한 자유법안’에 대하여 “쉽게 말해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보장하고, 탈북지원 단체들에 재정지원을 해 탈북 행렬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삐라 살포’용 풍선에 라디오를 같이 넣는 것도 미국무부의 ‘북한자유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미국무부는 ‘북한자유법안’ 시행에 따라 북한 지역에 AM, FM 라디오를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 자유법안’과 관련한 예산을 ‘국립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는 미국 민간단체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다.

NED라는 민간단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는 “‘NED’와 ‘CIA’ 그리고 ‘하태경 새누리당 전략공천’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민간단체 NED의 정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과 예산을 갖고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하나
- NED가 세상 1,500개 지원프로그램들에 뿌리는 현금만 2500만 달러가 넘는다
- NED는 활동범위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활동하는 CIA의 대표적 전위조직

NED가 미국 CIA의 “대표적 전위조직”이라는 주장은 칼 거스만 NED 사무총장의 입에 의해 직접 드러나기도 하였다. 정기열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1984년 NED가 창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칼 거스만은 “CIA가 직접 나서는 비밀공작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때문에 계속할 수도 없다.”면서, 이것이 “NED가 세상에 탄생한 이유”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탈북자 단체들이 벌이는 현 ‘대북 삐라 살포’ 등의 반복활동은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를 실현할 정권을 기대해본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종속적인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될 때 궁극적으로 해결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내맡긴 현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따라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위기 속에서 18대 대선을 목전에 둔 지금,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해체’는 의제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보수 후보인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야권 유력 대선 후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안철수도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인 한미동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발언이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분명한 지향, 종속적인 한미동맹 해체, 미국무기 수입중단, 국방비 감축, 이렇게 돼야 평화실현과 복지실현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대선 후보 중에서 종속적인 한미동맹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이정희가 유일하다.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 진보개혁세력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정권을 기대해본다.

우리사회연구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이버 탈북자인권센터
<http://cafe.daum.net/tbhuman>